

특 집

4者회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 허남성

4者회담 제의 1 년에 대한 평가와 각국의 입장 · 김용호

4者회담 추진 방향과 정부의 과제 · 김국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허남성 / 국방대학원 교수

머리말

지 금 한반도에서는 반세기가 넘도록 민족의 분단과 그로 인한 대결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한은 서로를 이념과 체제 그리고 정책적 적대자로 여기며 50여 년을 맞서온 것이다. 역사의 긴 눈으로 볼 때 반세기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한민족 사람들은 거의 일생을 그러한 非平和의 상태 속에서 지내왔다. 오랜 정전 상태가 말해주듯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안보 불안감을 बे개삼아 하루하루를 잠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다만, 그런 상태가 습관화되다보니 모두가 대결과 긴장 상태에 무감각해져 있을 뿐이다.

세계는 이미 80년대 말부터 전개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에 따라 탈냉전 상황을 맞고 있으나, 한반도만은 여전히 이념의 불모로서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 있다. 한반도에서 이러한 냉전의 얼음을 녹이고 민족의 봄을 구가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

엇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본고는 우선 평화 또는 평화체제(peace regime)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개념 규정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과 단계가 필요한지를 살펴본 후, 이어서 평화체제와 4者회담간의 관계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평화체제란 무엇인가?

평화는 우선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폭력(또는 무력)을 사용하여 상호간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사태도 없어야 평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간에 현재 전쟁은 없는 상태이나 법적으로는 1953년 휴전 이래 정전 상태가 지속 중이며, 북한에 의한 끊임없는 대남 테러 무장 공비 침투 및 심리전 위협 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평화 상태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러한 전쟁과 폭력(물리적 및 심리적)이 없는 것만으로 진정한 평화가 달성되

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담을 맞대고 있는 이웃 사이에 비록 다툼과 욕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너는 너, 나는 나하는 식으로 만사에 무관심과 비협조 상태로 지낸다면 어찌 그 골목에 평화가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진정한 평화란 당사자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해 더불어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 곧 항구적이며 궁극적인 평화는 통일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이 부자연스러운 분단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호 대결과 갈등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이 그리 쉽게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일은 성경의 한 귀절같이 도둑처럼 느닷없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중단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무리하게 통일을 촉진시키려고 할 때 그것이 도리어 불신과 대결을 심화시킬 우려도 높다. 남한은 늘 북한의 무력 적화 통일 위협에 시달려왔고, 북한 또한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불투명한 현 상태에서나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 곧 항구적이며 궁극적인 평화는 통일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이 부자연스러운 분단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호 대결과 갈등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이 그리 쉽게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중단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무리하게 통일을 촉진시키려고 할 때 그것이 도리어 불신과 대결을 심화시킬 우려도 높다.

마 남북한 사이에 내구력있는 평화 상태를 조성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항구적 평화의 조건인 통일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남북간에 민족 파멸적인 전쟁의 재앙을 막고 민족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시간 벌기의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두 개의 실체로 공존하면서 평화 상태를 지속하기 위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peace regime) 구축은 임시적이며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해야만 된다. 현 단계에서 남북한간에 평화를 일구어내는 것이 물론 간요하지만, 그것이 분단 고착화로 가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한반도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의 현 상태에서의 평화와 안정(status quo)을 더 중시하는 나머지 자칫 2 개의 한국 정책을 선호할 수도 있으나,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임시적 평화체제가 통일에 바탕을 둔 항구적 평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남북한간의 평화체제 구축 조건은 우선,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 침공할 수 없도록 힘(군사력)의 균형을 통한 안정적 균형을 전제로 한다. 둘째, 당사자 원칙의 확립이다. 셋째, 국제적 협력과 보장 장치의 확보이다. 끝으로,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여야 한다.

이 임시적 평화에 안주하지 말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통일은 당연히 평화적 통일이여야 한다.

그러나 본고는 현 단계에서 남북한간 평화체제의 구축이 당연한 대결과 갈등 상태를 완화하고, 나아가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도 순기능을 발휘하리라는 전제 하에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우선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 방법 모색에 모아질 것이며, 그 다음 평화적 공존이 평화 통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조건과 단계

전통적인 안보 격언에 “평화를 원하거나 전쟁을 준비(대비)하라”는 베게티우스(Vegetius)적 명제가 있다. 전쟁에 대비한 충분한 군비가 마련되어 있다면 감히 누구도 도발을 못할 것이며, 따라서 평화를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힘의 우위에 입각한 평화는 이른바 독단적 평화(dictated peace)이다. 그러나 평화나 안보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빛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힘의 우위에 있는 당사자는 자기 의지에 따른 평화를 구가할 수도 있겠지만, 힘의 열세에 처한 당사자는 의당 안보 불안감에 빠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비 증강에 몰두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군비 경쟁에 휘말릴 것이고 결국 이러한 독단적 평화는 자갈밭의 유리컵 만큼이나 불안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한간의 평화체제는 어떠한 전제 조건 하에서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은 우선,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 침공을 할 수 없도록 힘(군사력)의 균형을 통한 안정적 균형(stable balance)을 전제로 한다.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어떠한 평화체제도 허구일 수밖에 없다. 상호 군비 통제를 통하여 군사력의 균형 및 축소를 달성하고, 병력의 공격적 배치를 조정하여 서로 경보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며, 군사 교류 및 군사 연습의 상호 참관 등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취하는 것들이 안정적 균형을 이루는 길이다.

둘째, 당사자 원칙의 확립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도 직접적인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요즈음 소위

‘通美封南’ 정책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만 논의하고 한국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脫냉전시대에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한체제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절박한 인식뿐만 아니라, 북미 양자 관계를 공식화함으로써 한국과의 정통성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북미제네바핵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제는 정전체제를 대체할 북미평화협정 체결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가운데 어느 일방이라도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 확립, 즉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평화로 가는 시발점이다.

셋째, 국제적 협력과 보장 장치의 확보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특히 동북아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국제적 보장 장치가 마련될 때 평화체제의 지속성도 유지될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조건들을 고려할 때 평화체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와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전체제를 정상화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현상 유지(status quo) 차원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이다.

손상된 정전체제를 정상화시키는 일은 구멍 뚫린 한반도위기관리체제를 복구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기존의 국제적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끝으로,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여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한 공존을 전제로 한 평화체제 구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만이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임시적 평화체제가 지나친 내구력을 발휘하여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을 저해하게 해서는 안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조건들을 고려할 때 평화체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와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정전체제의 정상화 및 유지
- 군사적 안전성 확보 및 신뢰 구축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 국제적 평화 보장 장치의 확보
- 평화 통일의 모색

첫째, 정전체제를 정상화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현상 유지(status quo) 차원에서 가장

둘째, 남북한간에 상호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남북한간에 당사자 원칙에 입각한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상호 신뢰와 군사적 안정성이 달성되면, 다음 단계는 정전협정을 보다 내구력있는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취해야 할 조치이다. 정전협정은 위반사 제재 조치의 결여 등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분쟁 재발 방지에 나름대로 중대한 기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지난 1994년 이래 북한의 교묘하고도 집요한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 - 예컨대, 군사 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운영의 거부와 판문점공동경비지역(JSA: Joint Security Area)을 포함한 비무장지대에서의 계산된 무력 시위 등 - 으로 정전협정은 크게 손상되었다. 이처럼 손상된 정전체제를 정상화시키는 일은 구멍 뚫린 한반도위기관리체제를 복구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기존의 국제적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현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현상 유지 대책은 발전적 미래를 담보해주는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둘째, 남북한간에 상호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호 신뢰 구축

조치(CBM) 또는 위험 감소 대책(RRR: Risk Reduction Regimes)의 구체적 실현에는 군사 연습의 사전 통고 및 상호 참관, 국방 인사들의 상호 방문 및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상

호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줄이고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후방으로의 병력 재배치, 그리고 재래식 군비 및 대량 살상 무기의 군비 통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쌍무적 긴장 완화 조치외에도 북한을 다자간 안보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동북아 지역 차원의 안보협력체제와 같은 틀을 형성한다면 안보 딜레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의 '先 신뢰 구축, 後 군비 통제 원칙' 과 달리 '先 군비 축소, 後 신뢰 구축' 을 주장하는가 하면, 1988년과 그 후에 제안한 바와 같이 3년 내에 남북한군을 10만 명으로 감축하자는 식의 비현실적이고 선전적인 대응을 해왔던 전례도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과 인내가 수반될 것이다.

셋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남북한간에 당사자 원칙에 입각한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상호 신뢰와 군사적 안정성이 달성되면, 다음 단계는 정전협정

을 보다 내구력있는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남북한간에는 이미 1992년에 합의했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틀로 삼아 「남북불가침협정」을 맺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현 정전위원회 대신 가동하여 여러 합의 사항들을 상호 감시·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유엔 군사령부는 安保理의 동의 하에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 주둔 문제는 유엔사와 달리 한미간의 쌍무적 성격이 강하므로, 양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동맹관계의 해소와 미군 철수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한미 군사 관계의 재조정은 불가피하여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주한 미군의 역할도 亞·太 지역의 안정을 담보하는 균형자적 성격(expeditionary mission)으로 변모될 것이다.

넷째, 한반도평화체제는 국제적 보장 장치가 마련될 때 더욱 안정성을 가질 것이다. 현재 북한이 정전체제 무실화 책동과 「남북기본합의서」의 死文化 책략을 쓰고 있는 경험으로 보아, 한반도평화체제가 언제 한낱 종이 조각으로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평화체제는 국제

넷째, 한반도평화체제는 국제적 보장 장치가 마련될 때 더욱 안정성을 가질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평화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남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때,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은 평화 통일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항구적 평화는 통일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남북한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고, 주변 4강들에게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통일 한국에 의해서 더욱 확고해질 수 있음을 부단히 설득해야 한다.

적 보장 장치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 감시를 위한 미·중의 역할을 명시하거나, 유엔의 통제 하에 제3지역 국가들(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국가들)로 하여금 감시토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 4강이나 어떤 다른 국가들이 동북아 안정을 명분삼아 분단적 평화체제를 장기화 내지 고착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제적 보장 장치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시 가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직하다.

끝으로, 한반도평화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남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때,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은 평화 통일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항구적 평화는 통일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남북한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고, 주변 4강들에게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통일 한국에 의해서 더욱 확고해질 수 있음을 부단히 설득해야 한다. 남북한은 「남북협력위원회」 같은 공동 기구를 통하여 경제 협력,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자 국제적 사안이기도 하므로, 우선 당장은 4者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 형식은 4者회담의 모양을 유지하더라도 내용 상으로는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자가 되는 2+2 형태가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이 가담하는 2+2+2의 형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인원 물자의 원활한 교류, 문화, 체육, 학술 등 동질성 회복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각종의 국제적 행사에 단일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 국제 기구에서의 단일 대표성 확장 등을 도모함으로써 점차 사회 각 분야의 통합 기운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화폐의 통합, 경제 발전 계획 및 집행의 통합, 군사 통합, 정치 통합 등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건과 단계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추진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이 땅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공존 공영의 틀 속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 역량을 증진시키며, 마침내는 평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분단 상태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이다.

맺음말: 평화체제와 4者회담

위에서 살펴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

제는 남북한의 문제이자 국제적 사안이기도 하므로, 우선 당장은 4者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 형식은 4者회담의 모양을 유지하더라도 내용 상으로는 남북한이 주

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자가 되는 2+2 형태가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이 가담하는 2+2+2의 형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하여 4者 회담을 제안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북미간 접촉을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함의를 띠고 있다. 돌이켜보면, 북미제네바핵합의 이래 약속되었던 남북 대화는 방기된 채 미국의 북한 포용(engagement) 및 연착륙(soft landing) 정책만이 진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미국이 자신의 신국제 질서 구도 안으로 북한을 이끌어들이려는 의도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소외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양자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이익)가 합치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가려서 서로를 조화시킬 만큼 동반자적 관계가 성숙되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4者회담 아이디어는 한미 양국간 이해의 합치점(한반

도평화체제 구축)과 엇갈리는 부분(북미간 접촉 사안: 예컨대, 연락사무소, 유해 송환, 미사일회담 등)을 절묘하게 조정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한미공조의 공고함이 과시되었고, 미국은 자신의 대북 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의 동의를 확보하였으며, 한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문제는 북한의 태도이다. 북한이 4者 회담에 성의있는 태도와 자세로 임한다면 북한은 현재 당면한 경제난, 특히 식량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모든 당사자들이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회담 수락의 전제 조건으로 150만 톤의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그 양이 터무니없다. 150만 톤이라면 2,300만 북한 주민이 다섯 달을 버틸 수 있는 양이다. 매년 군사비로 거의 57억 달러를 쓰고 있는 북한이 식량 구입을 위해 단 한푼의 군사비도 깎을 생각이 없이 공짜 지원에만 의지하겠다는 것은 그 저의부터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의 대남 군사 위협 완화와 연계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화해와

문제는 북한의 태도이다. 북한이 4者 회담에 성의있는 태도와 자세로 임한다면 북한은 현재 당면한 경제난, 특히 식량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모든 당사자들이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식량 문제가 4者 회담의 걸림돌이 되기 보다 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를 유발시키는 촉진제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하여 4者 회담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나아가서 민족 통일의 산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협력의 장으로 나올 때, 그 보상으로 식량 지원과 경제 협력이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뜻이다. 한편,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할 1차적 책임은 물론 북한 당국에 있으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 또는 민족 재통합을 위해 동족으로서 최소한의 구호의 손길을 보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지원된 식량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을 확인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하여 구호 식량이 군량미로 전환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식량 문제가 4者 회담의 걸림돌이 되기 보다 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를 유발시키는 촉진제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하여 4者 회담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나아가서 민족 통일의 산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